

한반도 핵시대에 맞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성훈 | K-정책플랫폼 국제전략위원장, 前 통일연구원장 | dr.cheon@kinu.or.kr

1. 비핵화 외교의 실패

우리 국민 대다수가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을 믿지 않는 현실은 한미가 지난 30년간 추진해 온 비핵화 외교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1991년 9월 부시 대통령이 한반도에 배치된 전술핵자산을 모두 철수하기로 한 결정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확장핵억지 공약을 뒷받침하던 자산을 일방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수 있는 제어장치를 치워 주는 꼴이 되었다. 이후 미국 핵자산의 지리적 근접성이 떨어졌고 핵우산 공약의 신뢰성도 같이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이 한반도 역외에 배치한 전략핵무기는 바로 코앞의 남한 땅에 버티고 있는 전술핵무기에 비해 위협의 체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직접적인 핵위협에서 벗어난 북한은 오히려 핵개발에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다. 소련이 1970년대 초 세균무기금지협약이 체결되자 비밀 세균무기 프로젝트를 가동한 것과 같이, 상대방이 능력을 포기할 때 오히려 내가 확보해서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속셈이었던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은 1991년 11월 8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선언’을 통해 스스로 핵무장 권한을 포기했다. 당시 이 선언은 과학기술계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상명하달식 결정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배경에 의구심을 가졌었다. 후일 노 대통령은 이 결정에 대해 우리가 먼저 핵을 포기해서 비핵화의 모범을 보이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해 12월 18일 “이 시각 우리나라의 어디에도 단 하나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관한 한 11월 8일 선언한 비핵화 정책은 완전히 실현되었다”는 핵부재 선언을 하고 주한미군

전술핵이 철수되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주었다. 노태우 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치는 북한이 거리낌 없이 핵개발로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이 되었다. 노 대통령의 선언을 토대로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이 서명도 하기 전에 위반한 사생아와 같은 문건이다. 재처리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한 공동선언에 합의하던 당시 북한은 이미 영변에서 ‘방사화학실험실’이라는 이름의 재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었다. 북한에게 기만당한 한국이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의 위반으로 효력을 상실했다는 말도 못하는 사이에 북한은 국가의 최고이익 수호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서 공개적으로 탈퇴하고 핵개발에 전력 질주했다.

결국 1991년 가을 미국과 한국 정부가 순차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방어벽을 스스로 허물어 버림으로써 북한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핵개발로 나아갈 수 있게 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한미 양국의 북핵정책이 지난 30년 동안 실패를 거듭한 결과, 오늘날 한반도에서는 북한에 의한 핵독점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II. 핵시대에 들어선 한반도

재래식 전력의 시대에서 핵무력 시대로의 전환은 석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의 전환에 비유할 수 있다. 메가바이트(MB) 시대에서 기가바이트(GB)와 테라바이트(TB)를 뛰어넘어 페타바이트(PB) 시대로 진입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남북한의 재래식 대결 시대가 북한에 의한 핵독점 시대로 넘어가기 시작한 시점은 북한의 핵개발이 우리 안보의 레드라인을 넘어선 때이다. 필자는 그 시점을 2003년 4월 북경에서 열린 미·중·북 3자회담에서 이근 북한 대표가 켈리(James Kelly) 미국 대표에게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통보한 때로 본다. 이후 북한은 2005년 2월 10일에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고, 2006년 10월 9일에 제1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한국이 한반도에서 북한에 의한 핵독점 시대가 열린 것을 몰랐거나 애써 무시하면서 대화를 통한 북핵해결, 즉 비핵화 외교에 몰두하는 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 없이 계속했다. 3대에 걸친 핵무기 개발을 지속한 끝에 급기야 2017년 12월 12일의 군수공업대회 폐막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 “국가핵무력 완성의 대업을 이룩한 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사생결단의 투쟁으로 쟁취한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역사적 승리”라고 선언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패러다임의 역사적인 변환에 발맞추어 한국군은 환골탈태해야 한다.

군의 기본 마인드와 자세, 철학과 상황인식, 군사독트린과 전술, 교육과 훈련, 한미동맹 체제와 군사외교 등 군의 모든 분야가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 물론 환골탈태가 필요한 것이 군만은 아니다. 노태우 정부 이후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비핵화 외교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 지난 30년간 북한 핵문제 해결의 장을 주도했던 핵심 정책인 비핵화 외교가 실패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서는 ‘북한의 핵독점과 한국의 핵인질’이라는 비상한 사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이제 과거에 대한 진솔한 반성을 토대로 일방적 구애와 다름없는 비핵화 외교에 소모하던 국력의 낭비를 막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능력을 구축하는데 나라의 힘을 집중해야 한다. 북핵위기 대응태세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첫 단추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제대로 정리하는 일이다. 이 선언이 사실상 처음부터 북한의 위반으로 휴지조각이 되었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한국의 핵 옵션은 그 형태가 무엇이건 간에, 비핵화 공동선언을 그대로 두고서는 실현할 수 없다.

비핵화 외교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군사적 대비책은 북한을 자극해서 핵개발의 명분을 주고, 비핵화 외교의 동력을 떨어뜨리며,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나쁜 정책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 비핵화 외교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군이 북핵 위협에 능장 대처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국민적 지지하에 본격적으로 대응태세를 구축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진다는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북한문제만 터지면 정치권은 물론 군 지휘부의 첫 마디가 ‘한미동맹’이고 요즘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추가되었다. 국가안보의 주인공은 우리 자신임을 잊지 말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을 지킨다는 확고한 정신과 태세가 확립되어야 동맹으로부터 존중받고 타국과의 협력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스스로 지킬 의지가 빈약한 나라를 지켜 줄 동맹은 없다. 북핵 대비의 주력은 우리 군이며 동맹은 부수적인 보완 수단이라는 정신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

앞으로 전면전이나 국지전이 발생하면 북한은 핵보유법령 6조 4항에 명시한 핵무기의 사용조건에 따라서 핵을 선제사용하려 할 수 있다(핵보유법령 6조 4항: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핵 선제사용 전략은 북한이 호전적이기 때문에 취하는 무분별한 공격전략이 아니라 재래식 전력이 취약한 핵보유국이 채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전략이다. 냉전시대에 재래식 전력이 바르샤바조약기구에 비해 열세였던 NATO도 핵 선제사용 전략을 유지했다.

III. 핵시대에 미국 핵우산과 전략자산의 타당성 재평가

한미의 확장역지 강화 노력은 비핵화 외교와 충돌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양국이 북핵위협에 대응해서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대응태세를 강화할수록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보유 논리와 명분을 정당화해 주게 되기 때문이다. 비핵화 외교와 한미의 확장역지 강화는 상호 배타적이고 모순된 정책이다.

비핵화 외교는 북핵 위협에 대응한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대비책 강화와도 상충된다. 우리의 군사력 증강이 북한에 위협을 주고 핵보유 동기를 강화함으로써 비핵화 외교의 가능성을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비핵화 외교와 그 논리적 토대인 명분론(북한의 핵보유에 구실을 주어진 안된다)이 사라져야만, 한미 확장역지 강화나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대비책을 본격적으로 강구할 수 있다.

핵시대를 맞이하여 미국의 핵우산, 즉 확장핵역지가 북한과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재래식 시대의 핵우산은 선언적인 차원의 약속에 불과했다. 대북역지를 위해 한반도에 진입하는 미국의 전략자산은 무력을 과시하는 용도이거나 최악의 경우 재래식 전력을 사용하는 플랫폼 정도로 인식되었을 뿐이다. 남북한과 주변국 누구도 미국이 전략자산에 탑재된 핵무기를 핵이 없는 북한에 대해 사용할 것으로 믿지 않았다.

하지만 핵시대에는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핵무력과 핵전략을 확립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핵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핵우산 공약을 현실에 적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핵우산 공약이 자국의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새로운 각도에서 분석하고 대응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한국의 핵 옵션이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부정적인 논리를 극복하고 이런 옵션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설득 논리를 개발해서 국내, 미국 조야, 국제사회를 상대로 강력하게 전파해야 한다. 핵 옵션 설득 논리 전파와 독자적인 군사대비책은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핵시대라는 새로운 안보상황에서 전략자산 전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소위 전략자산이란 기본적으로 강대국(냉전시대의 미국/소련, 신냉전시대의 미국/러시아, 미국/중국) 간의 대결을 위한 핵전력이다. 전략자산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상대방의 인구 밀집지역이나 주요 산업시설과 군사시설을 공격해서 상대방의 전쟁수행 능력과 의지를 꺾어버리는 능력을 상징한다.

한반도에 전략자산이 전개되어도 핵을 쓸 가능성은 없다고 안심할 수 있었던 재래식 시대와 달리 핵이 사용될 수도 있는 핵시대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대응을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한반도문제에 전략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구실로 활용함으로써, 한반도가 미/중/러 핵전략 경쟁의 무대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이든 행정부의 핵태세 검토보고서도 북한이 미국과 동맹에 ‘억지의 딜레마(deterrence dilemma)’를 제기한다고 밝히고,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수의 핵국이 관여하는 큰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대북한 확장억지의 어려움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IV. 「NATO식 핵공유」와 「유사 핵공유」

NATO식 핵공유란 서유럽에 배치된 미군 핵전력을 해당 전력이 배치된 당사국과 양자간 협정을 맺어 공동으로 관리하고 훈련하며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적, 법적 체도를 말한다. NATO식 핵공유가 진정한 핵공유시스템이다. NATO 회원국 전체가 참여하는 핵계획 그룹(Nuclear Planning Group: NPG)과 북대서양위원회(North Atlantic Council: NAC)가 NATO의 핵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토론허거나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기구라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핵공유 체제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협력은 미국과 미군의 핵이 배치된 당사국 간의 양자협정에 근거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위, 한국식 핵공유라고 하면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2022년 10월 13일에 SBS 방송 인터뷰에서 국방차관도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가용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다양한 유사 핵공유 제안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미군 항모전단의 순환배치 방안의 문제점은 현재 일부 잠수함을 제외한 미국의 해군 전력, 즉 항공모함이나 함선에는 핵이 탑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1991년 9월 27일 제41대 부시 대통령의 ‘대통령 핵구상(Presidential Nuclear Initiatives)’에 의거해서 모든 핵탄두가 철수되었고 현재도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미국이 실전에 배치한 전술핵탄두는 모두 항공플랫폼, 즉 전투기와 전폭기에 탑재하는 ‘중력투하탄(gravity bomb)’으로 구성된다. 부시 행정부는 해외에 배치된 육상플랫폼에 기반한 전술핵무기를 철수하여 본토에 보관하던 같은 종류의 핵무기와 함께 폐기하고, 평시에도 함정, 공격잠수함, 지상배치 해군항공기에 전술핵무기를 탑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거리 미사일과 다양한 구경의 야포에

탑재하는 지상발사 전술핵탄두 등 육상플랫폼에 기반한 전술핵탄두는 모두 폐기되었다.

해군이 보유하고 있던 260기의 전술핵 탑재 토마호크 미사일(Tomahawk Land Attack Missile: TLAM/N)도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에 발표한 핵태세 검토보고서(NPR)의 정책에 따라 퇴역시켰다. 일본은 장거리 크루즈미사일인 TLAM/N이 대북 억지 차원에서 유용하다고 판단하여 오바마 행정부에 유지비용 부담을 제의하는 등 TLAM/N의 유지를 요청했으나 핵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오바마 행정부는 일본의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미 공군은 AGM-86 ALCM이라는 핵크루즈미사일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탑재하는 핵탄두인 W80은 수소탄급의 파괴력을 갖는 전략핵탄두다.

둘째, 한국 공군을 괌/하와이에 배치해서 훈련하는 방안도 문제가 있다. 우리 공군의 전술핵 운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는 있으나 억지력 제고의 2대 기준인 현시효과(visibility)와 전진배치(forward-deployment)에는 크게 미흡한 방안이다. 우리 공군이 괌/하와이에서 훈련을 하더라도, 어차피 위기가 발생하면 미군의 전술핵탄두를 한반도에 들여와서 우리 전투기에 장착해야만 이런 훈련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괌/하와이의 전술핵 탑재 전투기를 전쟁이 임박했을 때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은 위기 시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 전쟁이 임박한 위기 시 전술핵을 들여오는 것은 오히려 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북한은 전술핵을 탑재한 전폭기의 발진을 보고 한미가 핵전쟁을 시작하려 한다고 오관할 수 있고, 이는 북한의 선제 핵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한미 핵운용연습(Nuclear TTX) 방안도 대북 억지력 제고 차원에서 크게 미흡하다. 이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하기 전에 한미가 함께 핵무기 운용 연습을 하는 것이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제안된 방안이다. 기존의 확장억지수단 운영연습(TTX) 개념을 확대해서 실제로 핵전력을 사용하는 연습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핵우산의 신뢰성과 대북 억지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V. 시급한 군사적 대비책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기상의 이견은 있어도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었을 때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등 한국이 핵 옵션을 행사해야 한다는 데는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새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66.8%(한국일보), 한국의 독자 핵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6.6%(갤럽)에 달했다. 과거의 여론조사 추세에 비춰볼 때,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하는 의견도 독자 핵무장 지지 의견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2023년 들어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 정부에 비해 훨씬 더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역설했다. 1월 2일자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윤대통령은 “과거의 핵우산이나 확장 억제 개념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전, 소련·중국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미국이 알아서 다 해줄 테니 한국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지금은 그런 정도로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면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Joint Planning)–공동 연습(Joint Exercise)’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1월 11일 외교부, 국방부로부터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물론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전술 핵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우리 과학 기술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한미간에 이런 미 핵자산의 우려에 관해서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이런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우리의 안보를 미국이 지켜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간의 안보이익에 있어서 공통된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핵위기 대응태세 구축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대통령의 인식이 수렴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정부는 실천 가능한 대책부터 순차적으로 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미군 전술핵이 한반도에 들어올 경우 (반영구적인 재배치이든 유사시에 단기간의 배치이든 간에)에 대비해서 전술핵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전술핵을 야전 막사나 창고에 보관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유사시에 전술핵이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서 전술핵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저장소(Vault)를 미리 만들어 놔야 한다.

한미간에 전술핵을 공유하는 데 당장 합의하지는 않더라도 앞으로 그런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 대비해서 미국의 전술핵탄두(B61-12)를 탑재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즉, 우리 공군이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를 모두 장착할 수 있는 이중용도전투기(Dual-Capable Aircraft: DCA)를 보유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도입할 F35-A 전투기는 이중용도

기능을 갖춘 F35-A IV를 구매해야 하며, F-15, F-16 전투기의 일부도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교체 작업을 해야 한다.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한 민방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핵공격에는 전면적인 방어가 불가능하고 과도한 비용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핵방호는 핵이 폭발한 진원지와 근접지역에 대한 방호가 아니라 2차 피해(방사능, 파편과 열폭풍)에 대비하는 게 중점이다. 전국을 벌집 쑤시듯이 뒤집어 놓을 수는 없는 일이고, 국민을 상대로 해서는 제한된 규모로 경보와 안내, 교육에 중점을 뒤야 할 것이다.

VI. 미국의 전술핵 현대화

미국은 보유하고 있는 중력투하 핵탄두의 수명을 20년 연장할 목적으로 전술핵탄두 3종(B61-3/4/10)과 전략핵탄두 1종(B61-7)을 해체하여 성능이 개선된 신형 핵탄두(B61-12)로 개량하는 현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B61-12는 약 30년간 1조달러를 투입하여 5종류의 신형 핵탄두를 생산하는 핵탄두 개량사업의 첫 성과물이다. 미국은 2015년 7월에 B61-12 핵탄두 투하 실험에 성공했고 앞으로 400에서 480개의 B61-12를 생산할 계획인데, 핵탄두 1개의 비용이 2,500만달러에 달해서 미국이 보유한 가장 비싼 무기로 알려져 있다. B61-12는 전략폭격기 B-2A, LRS-B뿐만 아니라 전술폭격기·전투기인 Tornado, F-15E, F-16A/B, F-16C/D에 탑재 가능하며 F-16을 대체할 F-35는 B61-12 두 발을 장착할 수 있다.

B61-12는 세계 최초의 정밀유도 원자탄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술적 특성을 갖는다. 더 작고 더 정확해지고 부수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지하 침투력도 높아진 B61-12의 특성으로 핵무기의 실전 사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와 함께 그만큼 핵무기의 역지력을 높였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 정밀도 향상: 재래식 JDAM 폭탄의 4개 핀으로 구성된 꼬리날개(Tail Kit)를 장착하여 정밀도를 대폭 향상함으로써 지하시설 등에 대한 효과적인 파괴가 가능하다. B61-12의 정확도는 공산오차(CEP) 30m 정도로 판단되며 이는 기존 중력투하 핵폭탄의 CEP 91~116m에 비해 정확도가 3~4배 향상된 것이다.
- 지하 침투능력 구비: 지하표적을 상대로 한 ‘지면충격커플링(Ground-Shock Coupling)’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하에서 성공적으로 폭발할 경우 핵탄두의 파괴력에 비해 15~25배 증강된 폭발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50kt급 B61-12가 지하에서

폭발할 경우 예상되는 파괴력은 750~1,250kt에 달하며, 최소 규모인 0.3kt급 B61-12도 4.5~7.5kt 규모의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 파괴력 조절 능력 확보: 투하 전에 핵탄두의 파괴력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Dial-a-Yield)을 통해 핵탄두의 파괴력을 최소 0.3kt에서 1.5kt, 10kt 및 50kt까지 조절함으로써 투하지점 주변지역의 피해를 줄이는 능력을 구비했다.

VII. 핵시대의 핵억지력 구축

한국은 한반도가 핵시대에 진입했음을 깨닫고 군의 전략과 교리, 태세와 훈련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 핵을 가진 북한이 선제사용까지 언급하는 상황에서,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대책을 찾는 자세가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핵시대에 맞는 전략적 사고와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국가역량과 방어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1년 365일 자나 깨나 북핵을 억지하고 방어하는 데 몰입할 수 있는 총력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

한국이 실제로 핵 옵션을 채택하기로 결정하면 그 이후의 행보는 전략적 모호성과 보안을 유지하면서 매우 조용하고 차분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당면한 안보위기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국론을 모으는 차원에서 초기에 일정 부분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정책이 궤도에 오르면 국내외의 논란과 시비를 최소화하면서 조용하고 치밀하고 차분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가 공동으로 확장억지 관련된 사항을 'NCND' 정책으로 대체한다고 발표하는 것이 진정한 확장억지체제 구축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